

# 선거구 획정안 놓고 전남 동·서부권 '입장차'

### 순천시 분구로 1석 추가 확보 여야 불문 환영 "조속 통과를" 서부권 "농산어촌 무시" 반발 해남완도진도+영암도 '혼란'

국회에 제출된 내년 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놓고 전남 동·서부권간 입장차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동부권은 인구 비례 원칙에 따른 획정안에 대체로 찬성하는 반면, 서부권은 농산어촌의 대표성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난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발표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결과'에 따르면 동부권인 순천 광양곡성구례갑·을(2석)이 순천 갑·을(2석), 광양곡성구례(1석)로 분구되면서 1석이 더 늘어났다.

반면, 서부권인 영암무안신안은 각각 다른 선거구와 통합되면서 선거구가 해체돼 1석이 줄어든다. 전남의 총 의석수(10석)는 변함이 없지만 동부권엔 1석이 더 늘고, 서부권엔 1석이 줄게 된다. 이번 선거구 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획정안을 두고 순천지역 정치권은 여야 할 것없이 환영 입장을 내면서 정계 특유의 조속 통과에 한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은 "순천시 해룡면 선거구를 되찾고, 순천시 단독으로 갑·을로 분구하

는 내용을 담은 획정안이 제출됐다"며 "하나의 시(市) 일부를 분할해서는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의 기본원칙과 선거구 '지역대표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해달라고 일관적으로 호소해 온 결과"고 환영했다.

국민의힘 천하람 순천광양곡성구례당 협위원장도 "순천의 독자적인 분구와 해룡면의 순천 선거구로의 환원이 모두 이뤄졌고, 전남의 10개 선거구도 지킨 완벽한 결과"며 "국회의장과 국회는 선거구 획정위의 획정안을 존중해 조속히 순천을 분구하는 내용의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서부권 정치권은 이번 획정안이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농산어촌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전남도당위원장은 "순천을 2개 선거구로 하면서 전혀 문제가 없던 영암무안신안 지역구를 공중분해했다"며 "순천, 여수 등 도시지역을 4개 선거구로 늘리면서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를 줄이는 편파적 결정을 했다. 도시 지역 선거구에 비해 농촌 지역이 포함된 선거구 인구가 더 많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번 획정안이 집권여당의 정치적 노림수라고 분석하며 향후 선거구획정위에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신 위원장은 "이번 획정안은 국민의힘 논리에 휘둘려 기형적으로 조정된 안으로 부당하다"며 "정계특위 위원으로서 이번 선거구획정안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

했다.

그러면서 "순천 지역을 의식한 국민의힘의 지역 공약을 위한 노림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선거구 조정을 최소화하는 것이 기본원칙이어야 하지만 전남의 경우는 10곳 중 8곳의 선거구를 조정했다. 이로 인해 유권자와 입후보예정자들

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해남완도진도 선거구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번 획정안에 따라 기존 선거구에 영암이 포함되며 약 2500㎢면적(광주면적의 약 5배)을 갖게 되는 초거대 선거구가 되기 때문이다.

해남완도진도 출마예정자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번 선거구 조정안은 엉터리다"며 "해남완도진도는 인구 하한선에 도 관계없건만 섬 2개군과 해남군을 고려하지 않고 영암군을 포함했다. 국회에서 잘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황지 기자 hwangji.choi@jnilbo.com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익표 원내대표와 최고위원들이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 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

## 민주, 부단체장 정치신인 가점 하향... "역차별" 반발

### 광역단체 부단체장 20→10% "후보자 배려 없는 판단" 비판

더불어민주당 총선거획단이 17개 시도 광역단체 부단체장 출신 정치신인에 대해 기존 20% 가산 비율을 10%만 부여하기로 결정하자 이에 해당하는 지역 출마예정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총선거획단 간사인 한병도 의원은

은 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총선거획단 5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당원과 특별 당구에 따르면 정치 신인은 공천심사 및 경선에서 10%에서 20%까지 가산을 받게 돼 있다"며 "내년 총선 공천 심사시에는 17개 시도 광역단체 부단체장에 대해 기존 20%의 가산점을 10%만 부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21대 총선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고, 변동된 사항은 광역단체장에 대해서만 10%의 가산을 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결정에 광주·전남 부단체장 출신 출마예정자들은 역차별이라며 항의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출마예정자는 "지금껏 정치인이 아닌 공무원의 신분으로 살아왔는데, 인지를 이유로 정치신인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부단체장, 공직자 신분이라는 이유로 권리 당원 모집도 못하게 하는 등 손발을 묶어 놓는 조치를 해놓고 신인가점 하향 조정까지 한다니 당에 서운한 마음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출마 예정자 중 부단체장을 지내지 않고도 지역에서 더 넓은 입지와 인지도를 가진 분들이 많은데 이번 결정은 탁상공론에 의한 역차별이다"며 "하다못해 사전 예고라도 있었다면 대안이라도 마련해 뒀텐데, 총선이 불과 4개월 남은 상황에서 일반적 통보안인가. 후보자를 전

혀 배려하지 않은 판단이다"고 비판했다. 현행 특별당구에 따르면 정치신인은 공천 심사 및 경선에서 10%~20% 가산을 부여받는다. 선출직이 아닌 공무원 출신 시·도광역지자체 부단체장도 여기에 해당된다.

이례적으로 내년 총선에서 가산점을 10%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부단체장 인지도를 따졌을 때 '신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은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예비 후보자의 '막말 논란'도 검증하기로 했다. 서울=김선욱·김은지 기자

세계로 울리는  
아리랑  
Arirang To The World

2023. 12. 08  
Fri 19:30

국립과천과학관  
어울림홀

주최  
Jindo, 정선군, 밀양

주관  
arirang 아리랑국제방송 全南日報